도전의 역사, 성공의 역사로 반드시 바꿔나갈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북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소중한 시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만을, 오직 민생만을, 오직 전북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민선8기 3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알아봤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Q. 민선8기 3년을 맞았습니다. 소회가 궁금합니다

- 지난 3년, 전북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켜 세우라는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전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도전경성'의 믿음으로 전북을 바꾸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이 쌓여 변화의 물꼬가 터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압도적으로 꺾고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가 되었고, 133일 만에 전북특별법을 통과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7곳 포함 198개 기업과 16조5,000억원 투자 유치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초지일관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도민께 겸손하고 도정엔 유능한 도지사가 되겠다는 약속, 임기 마지막까지 지키겠습니다.

Q.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 가장 큰 성과는 세계 최고의 병원인 메이요 클리닉과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협력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메이요 클리닉이 위치한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는 인구 12만 정도의 소도시인데 도시 경제가 병원 중심으로 돌아갈 정도로 클리닉의 의료기술과 치료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연간 의료 수입만 25조원에 달합니다. 이런 병원이 이번에 전북과 손을 잡았습니다. 뇌 수술에 쓰이는 고정장치를 전북의 탄소 소재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장치를 탄소로 만들면 기존 알루미늄보다 무게는 3분의 1로 줄고 강도는 2배 이상 높아져서 의료혁신이 가능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메이요 클리닉에서 쓰이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전북 탄소소재로 바꿔 전 세계에 공급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Q. 글로벌 금융 기업과도 교류가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 세계적인 금융사인 피델리티, 뱅크오브뉴욕(BNY) 등과도 만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고, 이제는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도시로 키워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전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고, 자산의 일부를 외국 금융사에 맡겨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도 국민연금이 있는 전북에 상당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뱅크오브뉴욕은 이미 전주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피델리티도 사무실을 낼 계획입니다. 이미 16개의 자산운용사가 전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을 전북으로 더 끌어들이고, 자산운용과 투자의 생태계를 키울 생각입니다.

Q. 가장 큰 현안입니다.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 국제경쟁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IOC가 지정한 '올림픽의날'에 맞춰서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도 차원에서 우선 출범시켰습니다. 2,036명의 유치위원도 위촉해서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의 뜻을 전했습니다.

통상 국내 유치후보도시가 정해지면 두 달 이내에 국가 차원의 유치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내란 사태와 대통령 선거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보폭을 넓히고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총리님이 취임하는 대로 범국민 유치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책도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문체부, 외교부, 국회와 손잡고 IOC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서겠습니다. 광주, 대구, 대전, 충남, 충북과 함께 경기장을 나누는 연대 개최 전략은 서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가장 경제적인 올림픽을 실현해 낼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전주올림픽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정부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6월 25일에는 완주군 방문이 다시 한번 무산됐는데요? 공식적인 대화가 원천 차단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찬성이든 반대든 각자의 입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같은 도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역의 삶과 미래를 위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경청해야 합니다. 차이와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합리적 토론이 전제되어야 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게 기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수결 투표로 결론을 내고, 다수는 소수의 목소리를 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언제든, 어떤 주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Q. 반대 측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통합에 도지사가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통합 논의는 과거와 다르게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완주군민 6,000여명이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적 요건인 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서 군과 도를 거쳐 통합건의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됐고, 위원회에서는 주민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통합 권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군민'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듣고 완주의 현재와 미래까지 아우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는 올해 들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 군민들께서 꼭 깊이 고민하고 판단에 참고해야 할 중대한 변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주 하계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은 도시 이름으로 유치가 추진됩니다. 지금의 전주와 완주가 통합된 이후의 규모와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국제 무대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명약관화합니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완주군민들께 돌아갈 브랜드 가치와 여러 혜택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는 대광법 통과입니다. 28년 만에 통과된 대광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망이 본격화되는데, 핵심 축은 완주의 간선도로입니다. 통합이 이 교통망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군 통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통합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와 지원이 어떻게 달라질지,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Q. 28년 만에 대광법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무엇입니까?

- 지금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시군 의견을 다 모아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8년 만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역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3특 체제에 대비하는 전북발(發) 교통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 하계올림픽 후보 선정·특별자치도 출범 등 변화의 물꼬 터져
> 메이요 클리닉과 의료기기 개발 협력… 미국 출장 최대 성과
> 하계올림픽 범국민 유치지원위 출범키로… IOC 위원 설득 준비
> 특별자치도 출범 후 농생명 등 전북 강점 살린 산업기반 현실화
>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 완성 단계로 나아가야

Q.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지난 1년 동안 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바탕으로 75개 과제로 만들고, 그중 58개를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새만금 고용특구처럼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산업기반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주의 사례를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주도도 처음엔 무용론이 나왔지만 6년 뒤부터 세수가 늘고 인구가 돌아왔습니다.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가 제대로 뿌리내리면 인구가 늘고 기업이 오고 돈이 돕니다.

Q. 김관영 도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기업 유치입니다. 3년간의 투자 유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지난 3년간 총 198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16조4,611억원을 유치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북의 연평균 투자유치 금액은 약 3조원이었는데, 지금은 연평균 5조원을 훌쩍 넘기며 두 배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유치 기업의 27%가 미래첨단산업 기업으로,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5%에 달합니다. 전북의 산업생태계가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앞으로도 바이오, 모빌리티, 탄소융합, 방위산업, 이차전지 같은 미래산업 핵심기업을 더 끌어오겠습니다. 특히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틈새시장을 노려 탄소소재를 융합한 의료기기, 새만금을 활용한 무인 방위산업 실험 같은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확대, 국가산단 조성, 노후산단 재정비까지 기업이 오고 싶은 기반을 촘촘히 깔겠습니다.

Q. 기업들의 협약이 실질적인 투자 이행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투자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공장이 돌고 사람을 채용해야 성과가 와닿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협약 후 부지 계약부터 공장 설계·건축, 시험가동까지 3~5년은 소요되다 보니 최근 협약기업일수록 이행률이 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끝낸 기업들을 보면 이행률이 80% 가까이 됩니다.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더 빨리 정착하도록 투자보조금 선지급 제도를 확대해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도 내실을 기해서 전문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3,900여건의 애로사항 중 60% 가까이 해결하면서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새만금 개발에 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 새만금을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기술과 산업을 먼저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만금을 키워보자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이 서부개척으로 성장했듯, 새만금을 대한민국 프런티어의 상징으로 삼자는 게 제 구상입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1년만 늦어져도 선두그룹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선도적으로 규제를 풀어 시도하고, 전국으로 성과를 확산시키자는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에서는 바이오, 방위산업, AI 농생명 산업, 이차전지 등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AI 농기계로 유명한 미국 존 디어가 "우리는 인류를 대신해 혁신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것처럼, 새만금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을 직접 개발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Q. 새만금을 계획에서 현실로 완결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 새만금은 이제 계획 단계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국가가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선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꼭 도입해야 합니다. 개발·규제·투자 기능을 하나로 묶어 기반시설을 빠르게 깔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예타일괄면제부터 규제특례 확대, 신산업 테스트베드, 민간투자 유치까지 한 번에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주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도 필요합니다. 새만금 전담 TF를 만들어 새 정부 직속으로 두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규제완화부터 제도개선, 전략수립까지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지원체계를 만들어야 새만금이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Q. 공공의대도 핵심과제입니다. 추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공공의대는 전북의 오랜 염원입니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에 몰린 의사 인력을 지역으로 돌리고,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도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했고, 보건복지부도 내부 업무보고에 설립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은 공공의대를 설립할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이제는 입법이 남았습니다. 계류된 공공의대 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의료계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습니다. 도지사로 일하시면서 느꼈던 현장의 어려움과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 지방은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도지사로서 매일 현장을 다니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 지방재정의 한계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건 다행이지만, 지방에 내려보낼 때 2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국세가 줄면 지방 살림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교부세가 연이어 삭감되면서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30년간 지방은 많이 성숙했습니다. 이제는 예산과 인사, 제도 설계 같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적인 재정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높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다시 짜야 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인구감소나 고령화 같은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Q. 끝으로 도민께 하고 싶은 말씀?

-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하계올림픽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키워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실험되고 성장하면, 기업도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3대가 오순도순 모여사는 전북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런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지난 3년간 우리가 해낸 도전과 성취 덕분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써온 도전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로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오직 도민만 보고, 오직 민생만 보고, 오직 전북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만호 기자